유기자의 법률도우미

### 길림인우 & 한국 법무법인 재유

#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편집자의 말 :**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 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은 97만 5,983명이다. 그중에서 재한조선족이 63만 8,25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261만 6,007명)중 차지하는 비중이 24.40%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 조선족 인구수의 근 3분의 1에 달한다.

이 방대한 군체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이다. 본지는 유수의 재한 변호사사무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재한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봉착한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취지에서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를 신설했다.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본 코너 담당 유기자(13604447151, 위챗 동일)와 련락하여 자문하기 바란다.

중국에서 돈을 꾸고 몇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채 중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가만히 처분하고 외국에 도주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가? 만약 외국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중국에 거주중인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가?

최근, 중국 길림인우(仁祐)변호사사무소(정홍광, 중국변호사)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최필재, 한국변호사)의 협력이 해외에서의 중국 공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사례를 이끌어내 당사자의 호평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피고 엄씨 녀성은 연변주 모 시에 거주하는 원고 김씨 남성과 8만 500원을 한달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줄곧 갚지 않다가 2019년에 리식 1만원만 갚은 후 행방불명이 되였다. 그후 김씨는 엄씨를 연변주 모 시의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2021년 3월 10일에 내린 판결서에 피고 엄씨는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원고 김씨에게 본금 8만 500원과 약정한 월 2%의 리식을 갚으라고 적었다.

하지만 피고 엄씨가 한국에 갔고 국내에서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이 발견되지 않아 줄곧 집행할 방법이 없었다. 하여 원고 김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에 위탁했고 인우변호사무소의 협력 파트너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한국에 거주중인 피고 엄씨를 상대로 기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5일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XX시 인민법원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선고한 외국 판결에 기초하여 중국 위안화 80,500위안(주: 원) 및 이에 대한 2014.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중국 공민이 한국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이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다 싶이 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한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을 통해 중국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법과 상호 보증 원칙에 근거하여 한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숨기려고 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경봉기자

# 훈춘, 대형 사기사건 해명 … 41명 용의자 나포

최근, 훈춘시공안국은 면밀한 수사와 5개월간의 련속 작전을 거쳐 1건의 부감 민족자산 동결 해제와 관련된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 방모(남, 한족, 65세, 해남성 해구시 사람)를 우두머리로 한 범죄용의자 41명을 검거하고 장물 30여만원,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40대, 은행카드 50여장, 컴퓨터 5대 및 약간의 위조 허위 서류와 허위 계좌이체 기록을 압수했다.

지난 4월, 훈춘시공안국 형사범죄수사대대는 훈춘시 주민 왕모가 '민족자산 동결 해제 프로젝트'를 빙자해 사기를 쳐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단서를 입수한 후 훈춘시공안국당위는 이에 고도로 되는 중시를 돌리고 즉시 형사범죄수사대대에서 정예한 경찰력을 뽑아 전담팀을 내오고 사건 수사를 전개하게 했다.

전담팀 성원들은 대량의 사업과 자금 정리를 통해 해당 조직의 구성과 범죄 감행 방식을 확실히 파악했다. 이 단체는 "중화민국시기 손중산 신변의 주해정이라는 로인이 산속에 1,200조원의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109원의 프로젝트 회원비를 지불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꾸며 '109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민족자산 동결 해제 프로젝트를 꾀했다.

조사를 거쳐 이 집단은 인원이 많고 조직구조가 명확하며 등급이 분명하고 피라미드 분렬 모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집단은 '매협총회'를 주요 지도부로 총회, 대대, 중대, 소대 등 등급을 각각 설치하고 각기 회장, 부회장, 판공실 주임, 통계, 재무, 대장, 부대장, 강사 등 직무를 두었으며 골간대리인원은 전국 24개 성, 50여개 시에 널리 분포되여 사건 포괄 면이 넓었다.

이 사기범죄집단을 효과적으로 타격하여 대중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진섭하고 억제하여 사회적 영향과 사기의 숨은 화근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전담팀 경찰들은 단서를 따라 사기 은닉처를 추적하고 단서 인원 명단에 따라 검거조를 구성해 광서좡족자치구 옥림시와 백색시, 광동성 주해시, 섬서성 서안시, 산동성 청도시, 사천성 성도시, 하남성 우주시 등 지역에서 검거작전을 벌여 범죄용의자 41명을 나포했다. 심문을 거쳐 41명의 범죄용의자들은 민족자산 동결 해제 사기행각을 감행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현재 범죄용의자 방모 등 41명은 전부 훈춘시공안국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가 취해졌으며 사건은 진일보로 되는 처리중에 있다.

/ 리전기자

# 헤어스타일로 인한 미발 분쟁,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사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다. 때론 미발소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려 하다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망친 헤어스타일로 인한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고객은 망친 헤어스타일로 인한 미발소와의 분쟁으로 미발사에게 5만여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2023년 7월, 림모(가명)는 미발소에서 머리를 깎은 후 자기가 예상했던 효과와 빗나가자 화가 치밀어올라 미발사 오모와 다투었다. 오모는 림모의 요구대로 머리를 잘랐고 조작 실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림모의 불만에 의문을 표했다. 추호의 양보도 없는 두 사람의 말다툼은 손찌검으로 이어졌고 오모는 림모를 밀어 땅에 넘어뜨렸다. 림모가 넘어지면서 손에 있던 옥팔찌가 깨졌고 팔과 얼굴에도 정도부동하게 찰과상을 입었다. 쌍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였지만 배상책임에서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림모는 연길시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여 팔찌 가격 4만 6,000원과 의료비, 근무지체금, 정신손해배상금 등 도합 5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오모에게 요구했다.

이에 미발사 오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발 과정에 림모의 요구대로 머리를 깎았는데 고객이 불만을 드러내자 양보하여 미발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림모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오모의 미발 영업에 영향을 주었고 오모는 결국 감정이 북받쳐 손을 휘두르게 되였다. 오모는 본인이 먼저 손을 댔기에 이는 그릇된 행위임을 인정했으며 이미 4일간의 행정구류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림모가 요구한 배상금은 너무 많아 부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옥팔찌 구매 증명도 없기에 최고로 1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법관은 사건에 대해 료해한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사건의 쟁의의 초점은 림모의 옥팔찌 가격에 있다. 림모는 옥팔찌를 2017년에 5만 5,000원을 주고 샀는데 당시의 령수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모가 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 감정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서 감정 비용 8,000원을 먼저 지불하겠다고 했다. 본 사건에서 2명 당사자가 모두 조정 의향이 있고 쌍방의 모순이 크지 않으며 감정 절차를 밟으면 쌍방의 소송원가와 소송루적을 증가시키므로 조정은 본 사건의 가장 좋은 종결 방식이다.

담당법관의 반달 남짓한 인내성 있는 조정과 법리 분석을 거쳐 쌍방은 서로 양보하지 않던 데로부터 서로 량해하고 상대방의 어려운 생활상황을 충분히 리해하여 최종적으로 일치하게 1만 8,000원의 배상 협의를 달성하였다. 미발 사고로 인한 분쟁은 당사자 쌍방의 악수로 원만하게 해결되였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현실생활에서 리발 효과가 리상적이지 않은 원인은 부동하지만 사전의 의사소통 불충분, 지체성, 불정확성이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이다. 써비스 계약의 공급자와 접수자는 성실하고 우호적인 원칙에 따라 써비스 전과 과정에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여 써비스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피면해야 한다.

이 밖에 이 사건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 야기된 모순이지만 쌍방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아 일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거나 일방이 행정처벌을 받고 민사배상책임을 지게 되였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공민으로서 반드시 시시각각 자기 정서와 행위를 단속하고 주먹 대신 말로 관점을 표현하며 충동대신 리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시적인 충동으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심각한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 리전기자

# 전국 공안기관, 인터넷폭력 위법범죄 전문 타격

### – 상반기 인터넷폭력사건 3,500여건 수사 처리

최근, 공안부에 따르면 올해 공안부 '인터넷 환경 정화' 전문행동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전국 공안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감행하는 모욕, 욕설, 요언날조, 비방, 사생활 침해 등 인터넷폭력 위법범죄활동을 전문 타격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상반기에 인터넷폭력사건 도합 3,500여건을 수사 처리하고 법에 따라 800여명에 형사강제조치를 취했으며 3,400여명을 행정처벌했다.

공안기관은 인터넷 초점 사건과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타격정돈을 깊이있게 추진했다. 인터넷폭력 정보관리 규정을 발표해 인터넷폭력의 정의, 관리 조치와 법률 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했으며 법규 위반 계정, 기구와 인터넷 플래트홈에 대한 처리처벌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폭력 정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악렬한 후과를 초래한 사이트 플래트홈에 대해 엄숙히 문책, 처벌했다.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안전관리 제도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플래트홈간 인터넷폭력 련동 관리를 제때에 전개하며 인터넷폭력 문제의 처리 상황을 공포하도록 웹사이트 플래트홈을 독촉했다. 인터넷과 뉴미디어 선전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법률보급 선전교양을 적극 전개하고 광범한 네티즌들이 인터넷 언행을 규범화하도록 인도했다.

공안기관은 지속적으로 법에 의해 인터넷폭력 위법범죄 활동을 엄벌하고 인터넷폭력 위법범죄가 자생하는 토양을 견결히 제거하며 대중의 합법적 권익과 인터넷 생태 질서를 확실하게 수호하게 된다. 공안기관은 또 광범한 네티즌들에게 인터넷은 법외 공간이 아니므로 개인의 인터넷 언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자각적으로 인터넷폭력행위를 배격하며 기풍이 옳바른 인터넷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 신화법치넷

# 최고인민법원, 민법전 침권책임편 사법해석 발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침권책임편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이 9월 26일 발표되여 9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법해석은 민법전이 실시된 후 사회적으로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고 심판 실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권리의무 확정을 통해 분쟁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공평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했다.

사법해석은 불법으로 피보호자가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는 침권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가 가족을 찾는 데 사용한 합리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심각한 정신적 손해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형사제재와 함께 위법을 제재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한가지 주체, 두가지 책략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공민의 기본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고 혈육간정의 안정을 유지했다.

사법해석은 피보호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보호자는 보충책임이 아닌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학생이 학교내에서 학교외 인원에 의해 인신손상을 당하면 침권행위를 실시한 제3자가 제1책임주체이고 관리직책을 다하지 못한 교육기구가 후순위로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함제품으로 인한 제품 자체 손상은 제품 책임배상 범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육이 금지된 맹견 등 위험한 동물로 인한 피해는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고공물건 투척, 추락물체로 인한 피해 관련 책임주체의 책임 등을 명확히 했다. / 인민넷 – 조문판

최근, 백산변경관리지대 사도구변경파출소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전민국방교육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관할구역 변방 군중들의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을 효과적으로 증강시켰다. 사진은 경찰들이 밭머리에서 국방안전지식을 선전하고 있는 장면이다. / 길림일보

사례로 법 말하기 -2

# 미성년자가 라이브 방송 아나운서에게 준 팁을 부모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가?

**사례**

7살에 나는 리씨 소년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외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리씨는 외할머니의 휴대폰으로 모 게임 라이브 방송 플래트홈에서 ID를 신청한 후 며칠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플래트홈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플래트홈 라이브 방송 아나운서에게 팁을 주었다. 그 후 리씨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발견하고 플래트홈에 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적 설명**

되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전〉 제20조는 "만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무민사행위능력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했고 제157조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행위자는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환가보상해야 한다. 착오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쌍방 모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 인민넷 – 조문판